




최신 노동뉴스

2026년 5월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053-719-2408

 053-719-0019

< 차 례 >

【 고용분야 】

- 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 전국 확대 1
- E-9 외국인노동자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2
-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경감 3
-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 KDT AI 캠퍼스 44개소 선정, 5월부터 운영 개시 5
- 외국인 건설근로자, AI 통번역으로 퇴직공제금 신청 6
-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7
-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8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 9

【 감독분야 】

-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10
-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11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12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13
- 노동절 휴일 대체 불가, 기존과 동일 14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15
-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 16
- 이주노동자 중상해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17
- 외국인노동자 괴롭힘 의혹 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18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19

【 안전분야 】

-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20
-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중상해 사업장 기획감독 착수 21
- 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 운영 22
-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 23
-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24
-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결과 25

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 전국 확대

노동법·안전교육 1,400명 대상, 지역거점 중심 무료 지원

교육 대상	교육 비용	추진 시기
1,400명 중소기업 사업주·담당자	전액 무료 모든 교육과정 무료 제공	2026년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노동시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기술 발전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노동법·노사관계·산업안전 등 현장 대응 필요성 증대
- **중소기업 애로** 교육 접근성 낮고 대응 여력 부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대응 어려움
- **정책 방향**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선언, 지역 밀착형 교육 대폭 강화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주요 교육 내용 및 협력 체계

- **교육 내용** 디지털·AI 환경 변화 대응, 노동인권 기반 조직문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관계 법령 변화,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
- **협력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경영자총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전국 단위 협력 추진
- **특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위한 기초 노동법 교육 병행
- **교육 대상** 중소사업장 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현장 관리자 등

향후 계획 및 문의

- **추진 체계**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 진행,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신청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eli.kr)를 통해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E-9 외국인노동자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4월 20일~5월 6일, 총 15,774명 규모 모집

모집 규모	신청 기간	가점 제도
15,774명 제조업·농축산업 중심	4.20~5.6 2026년 2회차	신규 도입 특화훈련·안전리더

2026년 2회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개요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전체 일정** 2차(4.20~5.6.), 3차(7.6~7.17.), 4차(9.14~9.29.), 5차(11.23~11.27.) 예정
- **모집 규모** 총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주요 정책 내용 및 신청 절차

- **가점 부여 제도** 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점수제 가점 부여로 경쟁력 강화
- **탄력배정 운영**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1만명) 적극 활용으로 수급 수요 대응
- **신청 조건** 7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일정 및 문의

- **결과 발표 및 허가서 발급** 5월 21일 결과 발표, 제조·광업(5.22~5.29.),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6.1~6.8.) 발급 예정
-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7, 7148, 7153)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경감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3개월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무료 기간	시범사업
중·소규모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최대 3개월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	2가지 상생협력 + 지원금 지급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 **서비스 내용**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주요 사업 내용

- **상생협력 시범사업**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
-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
- **사업 목표** 퇴직공제 가입 및 신고 촉진,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 완화
- **운영 기간** 2026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중·소 건설사업주의 참여 확대에 중점

향후 계획 및 문의

- **기대 효과**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제도 정착 가속화
-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 (연락: 02-519-2131, 02-519-2075)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상습체불 제한, 변제금 징수 효율화 추진

회수기간 단축	회수율 현황	시행일자
132일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30% 민사절차의 누적 회수율	5월~6월 2026년 시행 예정

개정 배경 및 목적

- **전국적 고용위기 대응** 코로나19 등 전국 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 필요
- **임금체불 방지**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으로 체불 청산 유도 및 피해 감소
- **체불임금 회수 효율화** 민사집행 절차의 낮은 회수율(30%) 및 장기 소요기간 개선

주요 개정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대상**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한정 해제
- **지원유형 통일** 휴업·휴직 요건을 '근로 미제공'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여 신청 요건 단순화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고용촉진·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1년 3개월 체불 또는 1년 5회 이상 3천만원 이상 체불)
- **변제금 징수 절차 개편**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하여 회수기간 290일→158일 단축

기대효과 및 시행일

- **절차 단순화** 복잡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통일로 현장 이해도 및 활용도 향상
- **회수 효율화** 법원 확정판결 없이 강제징수 가능하여 평균 132일 단축, 회수율 증대 예상
- **시행 일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5월 12일·6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월 12일 시행

KDT AI 캠퍼스 44개소 선정, 5월부터 운영 개시

기업 21개·대학 7개·훈련기관 16개 참여, AI 전문인력 양성

선정기관	지원규모	프로젝트학습
44개소 기업·대학·훈련기관	월 40~80만원 지역별 훈련수당	30% 이상 실무 역량 강화

사업 개요 및 특징

- **추진배경** AI 도입을 본격화하는 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AI 전환을 이끌 청년 양성
- **양성직군**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지원, 출석률 기반 훈련수당(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인구감소지역 월 80만원)
- **참여자격**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누구나 참여 가능, 기업의 실제 현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30% 이상 편성

주요 참여기관 및 운영 현황

- **기업 참여** SK AX(판교·울산·광주 총 360명), CJ올리브네트웍스(180명, 서류전형 면제), 케이지아이씨티(배터리·제조 특화)
- **대학 참여** 성균관대(반도체·금융), 차의과대(바이오헬스), 인하대(자율주행), 경북대·부경대 등 지역 우수대학
- **훈련기관**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대구), 팀스파르타, 멀티캠퍼스, 구름 등 혁신훈련기관
- **채용연계** SK AX·CJ올리브네트웍스·케이지아이씨티 등이 인턴십·직무전형 면제·그룹사 채용 지원 제공

운영 일정 및 문의

- **운영시작** 5월부터 선정기관별 훈련생 모집 및 순차적 운영 개시
- **정보확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 고용24(work24.go.kr), 각 선정기관별 누리집에서 세부 사항 확인 가능

외국인 건설근로자, AI 통번역으로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4월 1일부터 서울남부경기지사에서 AI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적용 지역	핵심 기능
2026.4.1 AI 통번역 서비스 시작	2개소 서울남부센터, 경기지사	다국어 실시간 한국어 미숙자 지원

추진 배경 및 개요

- **서비스 개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 건설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지원
- **적용 대상** 외국인 방문 민원이 많은 서울남부센터와 경기지사내 전용 창구 마련
- **추진 시기**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작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AI 기반 기술**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하여 정확한 의사소통 실현
- **민원 처리 개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퇴직공제금 신청 등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가능
- **서비스 확대 계획**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 **통역사 불필요** 별도의 통역사 고용 없이 AI 서비스로 자동 처리 가능

향후 계획 및 문의

- **확대 방향** AI 통번역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민원 환경 개선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02-519-2460, 02-519-2462)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노무제공자도 IRP 가입 가능

가입 사업장	가입 근로자	적립금 규모
3만 8천개 도입 3년여 만의 성과	17만 명 지속적으로 확산 중	1조 7천억 원 2025년 8.67% 수익률

제도 개요 및 현황

- **푸른씨앗의 정의**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 중
- **주요 특징**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 부담금 10% 지원, 표준계약서 기반의 간편 가입 절차로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도입 가능
- **운용성과**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음

주요 확대 내용

-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확대
- **노무제공자 포함**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일하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형태로 가입 가능
- **사각지대 해소**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홍보 강화**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통해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로 제도의 중요성을 확산

향후 계획 및 문의

- **현장 홍보 강화**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홍보 활동 추진
- **지원 방안 확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 이용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명단공개 187명, 신용제재 298명 실시...3년간 공개 및 7년 신용제재

명단공개	신용제재	체불기준
187명 3년간 공개 대상	298명 7년간 신용관리 대상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요건

제도 개요 및 적용 기준

- **명단공개 대상** 지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 **신용제재 대상** 지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 **공개 기간** 2026년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및 체불액 공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주요 불이익

- **명단공개 조치**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상 구인 제한 등
- **신용제재 조치**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로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 **형사처벌 강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출국금지 대상 지정, 명단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 시 반의사불벌 규정 미적용
- **제외 대상** 체불임금 전액 청산, 사망·실종선고, 회생·파산절차 개시 등의 경우

제도 시행 현황 및 주요 사례

- **누적 통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명단공개 3,686명, 신용제재 6,232명
- **주요 사례** 여행업·건설업·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1억 원대 대규모 체불 발생, 상습적 위반 행태 드러남
- **정책 의지** 임금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관행 근절 추진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

인천 침구 제조업 사업장 폭행 사건, 근로감독정책단 주도 긴급 감독

감독 착수	감독 대상	처리 방안
즉시	다중	3가지
2026년 4월 25일 긴급 감독 개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법 처리·고용허가 취소·피해자 보호

사건 개요 및 조치 방향

- **사건 발생 지역** 인천 서구 소재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 **장관 지시사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속한 사건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 감독 지시
- **감독 체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전담팀 구성하여 긴급 착수
- **인권 강조**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로 평가

주요 감독 사항 및 법적 조치

- **감독 범위** 외국인 노동자 폭행·직장 내 괴롭힘·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다각적 조사
- **사법 처리**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가해자 형사 입건 후 수사 진행
- **행정 조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병행하여 재발 방지
- **피해자 보호**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및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

향후 계획 및 문의

- **진상 규명**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4월 22일부터 2개월간 300개소 감독, 임금체불 80% 차지

감독 규모	제보 접수	체불 비중
300개소 상반기 계획 규모	774개소 2월~4월 누적	약 80% 전체 제보의 비율

추진 배경 및 개요

- **목적** '숨어있는 체불' 선제적 청산 및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 근절
- **기간** 2026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
- **추진 이유** 재직자는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임금체불 등 신고가 어려운 점 고려

주요 내용 및 감독 방향

- **제보 현황** 2월부터 약 2개월간 774개 사업장 제보 접수, 현장 호응도 높음
- **제보 내용**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관련 80% 차지
- **감독 규모 확대** 전년 166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확대, 연 2회 실시 예정
- **감독 중점** 근로시간 기록·관리 철저 검토, 포괄임금 지침(4.9 시행) 준수 여부 점검

향후 계획 및 문의

- **제외 대상** 폐업 사업장, 제보 내용 불명확, 비노동법 신고, 진행 중인 사건 등
- **장관 의지** 익명제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공짜 노동'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13명 노동자 8,700만 원 체불한 사업주 강제수사로 검거

체불 인원	체불 금액	체불 기간
13명 일용직 취약계층 노동자	8,700만 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년 지속적 약속 반복 후 잠적

사건 개요 및 사업주 위반 행위

- **위반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피해 노동자** 대부분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 **사업주 행위** 약 1년간 임금체불 지속, 피해자에게만 약속 반복 후 연락 끊고 잠적
- **불응 사항** 근로감독관 출석요구 불응, 체불임금 청산 약속만 반복

수사 진행 및 구속 사유

- **수사 방법** 주거지 불명확한 사업주 추적을 위해 통신영장 발부받아 끈질기게 추적
- **소재 확인** 적극적인 추적 끝에 피의자 소재 확인하여 검거
- **구속 신청** 죄질 불량 및 도주 우려 크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 **강제 수사** 통신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 단계적 적극 활용한 대표 사례

피해자 지원 및 향후 계획

- **신속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적극 지원
- **강한 의지** 생계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계속 추진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26명 노동자 3,170만원 체불, 중간브로커 7백만원 착취 적발

체불임금	피해노동자	위반사항
5,490만원 2개 사업장 + 추가 5개소	26명 재직·퇴직 계절노동자	24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감독 대상 및 배경

- **감독 대상** 전남 고흥군 소재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
- **감독 계기** 이주노동자 단체의 임금착취·강제노동 의혹 제기로 기획감독 착수
- **감독 시행** 2026년 3월 특별근로감독 실시, 민간브로커 개입 정황 발견으로 신속 전환

적발 주요 위반사항

-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5백만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11백만원), 최저임금 위반(4.2백만원) 등 총 3,170만원
- **중간착취** 민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백만원 부당 착취
- **근로조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임금대장 미작성
- **산업안전**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건

향후 조치 계획

- **행정조치** 위반사항 24건 범죄인지, 임금대장 미작성 등에 대해 630만원 과태료 부과
- **집중신고**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이주노동자 대상 신고 접수
- **제도개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류지원 체계 강화 및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5월 1일 공휴일 확정,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 시행

제정년도	공휴일 국가	시행연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경과	OECD 34개국 OECD 38개국 중 89% 수준	2026년 올해부터 전 국민 공휴일 적용

추진 배경 및 의의

- **명칭 변경** 2025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결, 올해부터 시행
- **정부 취지**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민간·공공 부문 형평성 확보
- **국제 사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OECD 34개국 등)

주요 변화사항

- **적용 대상**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자도 공휴일 보장
- **기존 현황**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공무원·교사 등은 제외
- **후속 조치** 인사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추진
- **기념 행사** 노동부에서 5.1km 걷기 대회, 노동자 포상자 초청 기념식 개최

정부 입장

- **인사혁신처장**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공무원들이 재충전 기회 얻어 국민 봉사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은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의 상징적 의미

노동절 휴일 대체 불가, 기존과 동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63년 만에 실현, 5월 1일 유급휴일 확정

공휴일 지정	법률 효력	휴일 대체
2026.5.1. 노동절 공휴일 시행일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불가 5월 1일 고정, 대체 불가능

노동절 공휴일 지정 개요

- **제정 역사**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공식 지정됨
- **법적 근거** 구「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적용 범위**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포함하여 형평성 확보
- **국제 기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제 관례 반영

주요 내용 및 규정

- **휴일 지정** 5월 1일을 노동절로 특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
- **휴일 대체 불가**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5월 1일 고정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2004.2.19.)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 제시
- **법률 시행** 2026년 4월 9일 일부개정,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담당 부서 및 문의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1,011개 하청노조 14.6만명 교섭요구,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진행

교섭요구	대상사업장	참여인원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교섭 요구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수	14.6만명 총 조합원 수

교섭요구 및 절차 진행 현황

- **교섭요구 현황** 2026년 3월 10일~4월 9일 1개월간 총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14.6만명)에서 교섭 요구
- **부문별 분포** 민간부문 216개 원청·616개 노조, 공공부문 156개 원청·395개 노조로 구성
- **상급단체별** 민주노총 356개(47.7%), 한국노총 344개(45.7%), 미가맹 52개(7.0%)
- **진행 단계** 교섭요구사실 공고 33개소,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19개소, 한동대학교에서 첫 실제 교섭(상견례) 개최

노동위원회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사용자성 판단** 사용자성 인정 결정 6건을 제외한 총 54건의 사용자성 여부 미공고 시정신청이 진행 중
- **판단 사례 축적** 법 시행 초기로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도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확인을 추진하는 경향
- **교섭단위 분리 결정**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정 시작으로 직무별·상급단체별 분리 또는 기각 결정
- **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

향후 계획 및 정부 입장

- **현장 지원 체계**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
- **정부 방침** '대화촉진법'으로서 원·하청 간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

판단지원위원회 첫 자문으로 국세청·태권도재단 사용자성 판단

첫 판단 사건	사용자성 인정	판단 기준
2건 국세청, 태권도진흥재단	1건 국세청(작업환경 개선)	실질 지배 구체적 지배·결정 여부

판단 배경 및 의의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4월 8일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 **판단 기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전제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 검토
- **판단 절차** 신청인 주장 확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노동조합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사실 관계 종합 고려

주요 판단 결과

- **국세청 사용자성 인정** 전화상담 업무 위탁 시 국세청이 운영장소·시설·장비 제공 및 복리후생 개선 여부·범위·시기를 실질 결정
- **인프라 관리 권한**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어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수탁업체의 독자적 결정 곤란
- **태권도진흥재단 사용자성 부정**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결정 사정 확인 불가
- **판단 제한** 일부 교섭의제는 제출 자료 부족으로 추가 검토 필요하여 구체적 판단 미 실시

향후 계획 및 문의

- **현장 지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 구체화로 현장 법적 불확실성 완화
-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강승헌 과장 044-202-7611, 박미희 사무관 044-202-7607)

이주노동자 중상해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경기 화성 제조업체 폭행 사건, 노동·산안 합동감독 및 엄중조치 예정

감독 시작일	감독 대상	피해자 조치
2026.4.7.	경기 화성	산재보험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 착수	외국인 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급여 신청

사건 개요 및 감독 방침

- **사건 내용** 경기 화성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컨)을 주입하여 장기 손상 등 중상해 발생
- **감독 범위**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점검
- **엄중 조치**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 예정

주요 추진 과제 및 피해자 지원

- **산재보상 처리** 피해자가 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신속한 처리 방침
-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합동감독 실시
- **현장 실태 조사** 감독 과정에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
- **취약사업장 기준**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 우선 점검

기관장 입장 및 문의

- **장관 메시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를 약속
- **담당 부처** 근로감독정책단, 안전보건감독국, 국제협력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부서에서 총괄 대응

외국인노동자 괴롭힘 의혹 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충북 소재 사업장 욕설·폭언·식사 미제공 의혹에 대한 집중 감독 개시

감독 시작일	주요 의혹	감독 범위
2026.4.1. 기획 감독 공식 착수	4가지 식사 미제공·욕설·폭언·노조 탈퇴 강요	전반적 괴롭힘·부당행위·임금 체불 등

적발 의혹 내용

- **식사 미제공** 근로계약상 1일 3식 제공 약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혹
- **괴롭힘 행위** 욕설 및 폭언으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 **부당 강요** 노동조합 탈퇴 강요 행위
- **보도 경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 관련 의혹

추진 감독 계획

-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파악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 **법위반 점검**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 감독 실시
- **선제적 감시** 4월부터 취약사업장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근로감독 병행 추진

담당기관 및 의견

-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및 국제협력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 **고용노동부 입장** 권창준 차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미흡은 공동체 가치 훼손, 법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 및 선제적 예방감독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7개 지역청 데이터 분석 기획조사, 3개 사업별 전국 특별점검 추진

조사 기간	모니터링 유형	제보포상금
'26.4.~12. 기획조사·특별점검 시행	14개 유관기관 정보연계 활용	최대 3천만원 부정수급액의 20~30%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목적**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강화
- **발표 시점** 202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 발표
- **추진 체계**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사업별 특별점검 이원 추진

주요 조사·점검 내용

- **기획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 파악 후 점검 활용 ('26.4.~10.)
- **특별점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전국 단위 집중 점검('26.5.~12.)
- **정보연계** 국세청·법무부 등과 14개 유형 정보연계로 상시 부정수급 모니터링
- **제재 조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 제도

- **자진신고 혜택**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도 면제 가능(공모형·재범 제외)
- **신고포상금** 육아휴직·실업급여 연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30% 지급
- **신고 접수**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가능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4월부터 자체점검, 5월부터 초고위험 3만개소 감독·점검 실시

전수조사	초고위험	추진기간
10만개소 고위험 사업장 대상	3만개소 집중감독·점검 대상	4월~11월 자체점검 후 감독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배경**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 사고 지속에 따라 대통령이 위험사업장 조사 및 안전제도 현장 작동 점검 지시
- **조사 대상**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산업재해 이력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약 10만개소 선별
- **목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심도 제고 및 중대재해 근본적 감축을 통한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 **특징** 사업장 규모별·위험도별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주요 추진 내용

- **1단계(4월)** 10만개소 대상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자체 점검 및 개선 실시
- **2단계(5월~11월)** 자체 점검 미실시 또는 초고위험 사업장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점검 실시, 허위 점검 적발 시 즉시 감독·사법처리
- **3단계(상시)** 중·대형 사업장 전담관리, 소규모 사업장 공단·민간기관 컨설팅 연계, 일반 고위험 사업장 맞춤형 지원
- **활용 계획** 자체 점검 결과를 위험요인 관리 및 산업안전 행정에 적극 활용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강력한 조치** 안전관리 불충분 사업장 및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 및 집중 점검·감독 실시
- **차등 관리** 대형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관 전담관리, 소규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 예방기관 지원 연계를 통한 다각도 관리 추진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중상해 사업장 기획감독 착수

고압 공기 주입 중상해 발생, 노동·산안 합동감독 4월 7일 시작

감독 시작일	감독 대상	주요 위반
2026.4.7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	경기 화성 제조업 사업장	폭행·괴롭힘 산안법 위반 등 포함

사건 개요 및 즉시 조치

- **발생 사건**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주입해 장기손상 등 중상해 발생
- **감독 착수** 2026년 4월 7일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부 합동 기획감독 시작
- **피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신속 처리 방침

주요 감독 내용 및 조치 계획

- **감독 범위**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 **엄중 조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단행
- **추가 감독**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합동 감독 실시
- **설문조사** 감독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설문조사, 면담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 면밀 조사

장관 의견 및 정책 방향

- **기본 원칙**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강조
- **향후 방침** 진상 철저 조사 및 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 운영

4월 한 달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현장점검 대대적 전개

건설업 사망자	집중 발생 시기	초소규모 현장
<p>약 10%</p> <p>지붕·태양광 공사 비중</p>	<p>약 60%</p> <p>봄·가을 계절적 집중</p>	<p>약 65%</p> <p>1억원 미만 공사 비중</p>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망사고 다발** 2026년 3월 이미 3건 발생(채광창 추락으로 인한 3명 사망)
- **주요 특징**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65% 집중, 기본 안전조치 70% 이상 부재
- **계절적 위험** 봄(지붕 개·보수)과 가을(장마 후 복구)에 약 60% 집중 발생
- **주요 원인** 채광창 지붕재 파손,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미설치

4월 집중점검기간 추진 내용

- **캠페인 전개** 지방정부·유관기관(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안전주의보 전파
- **현장점검 강화** 지붕 전담 지킴이(200여명),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 민간기술지도기관 대상 집중 기술지원
- **안전정보 공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 운영으로 사고사례·안전정보 신속 전파
- **재정지원 확대** 50억원 미만 공사·10인 미만 사업장에 추락 예방시설 비용 최대 90% 지원

맞춤형 지원 및 후속 조치

- **교육 강화** 안전관리 역량 부족 업체 경영책임자·실무자 대상 안전보건 아카데미 교육 (CEO 12시간, 실무자 4시간)
- **행·사법 조치** 기술지원 시 개선 미흡 현장은 지방관서에 통보 후 엄중한 행정 조치 실시
- **축산 안전강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 추락사고 예방 내용 추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

5월부터 기온 상승에 따른 질식사고 위험 증가, 선제적 예방 체계 가동

맨홀 사망사고	집중관리 기간	안전수칙
0명 사전확인제 도입 후 추가 미발생	5.15~9.30 폭염 기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3대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추진 배경 및 개요

- **시간적 필요성** 매년 5월을 기점으로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급증, 여름철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
- **과거 사고 사례** 지난해 7월 이전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7명 발생하며 중대재해 반복
- **성공 사례** 2025년 7월 31일 이후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확인 의무화로 현재까지 추가 사망사고 미발생

주요 추진 과제

- **맨홀 작업 사전확인 의무화 안착** 폭염 기간(5.15~9.30) 중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체계 상시 유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
-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저장 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사고 대응 및 전파 체계 강화** 질식사고 발생 시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Alert)' 발동, 재해 발생 사업장에 무관용 원칙 적용
- **하도급 구조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용역·발주 현장에서 위험 정보 전달 및 안전 장비 실질적 지급 여부 현장 감독 강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 확인(산소 18~23.5%, 황화수소 1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환기**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최소 15분 이상, 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
- **보호구 착용**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반드시 착용(공기공급 없는 방진·방독마스크 사용 불가)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안전조치 소홀로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증거인멸 혐의

구속 사례	사고 발생일	구속 기소일
6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4.12.30 울산 선박제조업체	2026.4.3 검찰 구속 기소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의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 (2024.12.30.)
- **피의자 신원**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 (2025.3.9. 구속, 3.17. 검찰 송치)
- **혐의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주요 수사 내용

- **사고 원인**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 **증거 확보**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회사 관계자 집중 수사
- **증거인멸 혐의** 허위자료 제출로 안전조치 책임 회피 시도
- **구속 사유** 범죄 혐의 충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향후 추진 방향

- **강제수사 활용**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압수 수색·구속 등 강화
- **선례** 제련업체 중독사고('23.12), 전지업체 화재사고('24.6), 건설현장 화재사고('25.2) 등 적극적 대응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결과

사망자 113명(98건),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1분기 기준 최저 기록

1분기 사망자	사고건수	최고 기록
113명	98건	최저수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감소	'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최저

업종별 및 규모별 현황

- **건설업** 39명(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감소...특히 50억 이상 현장에서 22명(68.8%) 감소
- **제조업** 52명(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3.20.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대형 화재(사망 14명) 영향
- **기타업종** 22명(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40.5%) 감소...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명(69.2%) 감소
- **규모별** 50인 미만 59명으로 24명(28.9%) 감소, 50인 이상 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

사고 유형별 특성 및 지역 현황

- **사고유형** 떨어짐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31명) 감소했으나, 화재·폭발은 20명(+100%) 증가로 주요 관심 대상
- **물체에맞음·무너짐** 각각 18.8%, 27.3% 감소...끼임과 부딪힘은 전년 동기 대비 동일 수준 유지
- **지역별** 경기(22명), 경북(16명), 대전(15명) 등에서 발생...대전(+13명), 인천(+6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외국인근로자** 총 113명 중 18명(15.9%)...건설업 4명(40.0%) 감소, 제조업 4명(57.1%) 증가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감소배경** 작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 협업 강화 결과
- **화재대응** 소방청-노동부 화재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체계 구축...위험·불량 사업장 3,900여 개소 대상 합동 긴급 점검 진행 중
- **향후계획** 고위험 사업장(약 10만 개소) 전수조사 및 점검·감독 강화, 안전한 일터 지킴이(1천명) 통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 관리